토론문: “기로에 선 한미동맹과 한국의 대북정책”(전인영)

양일국(자유민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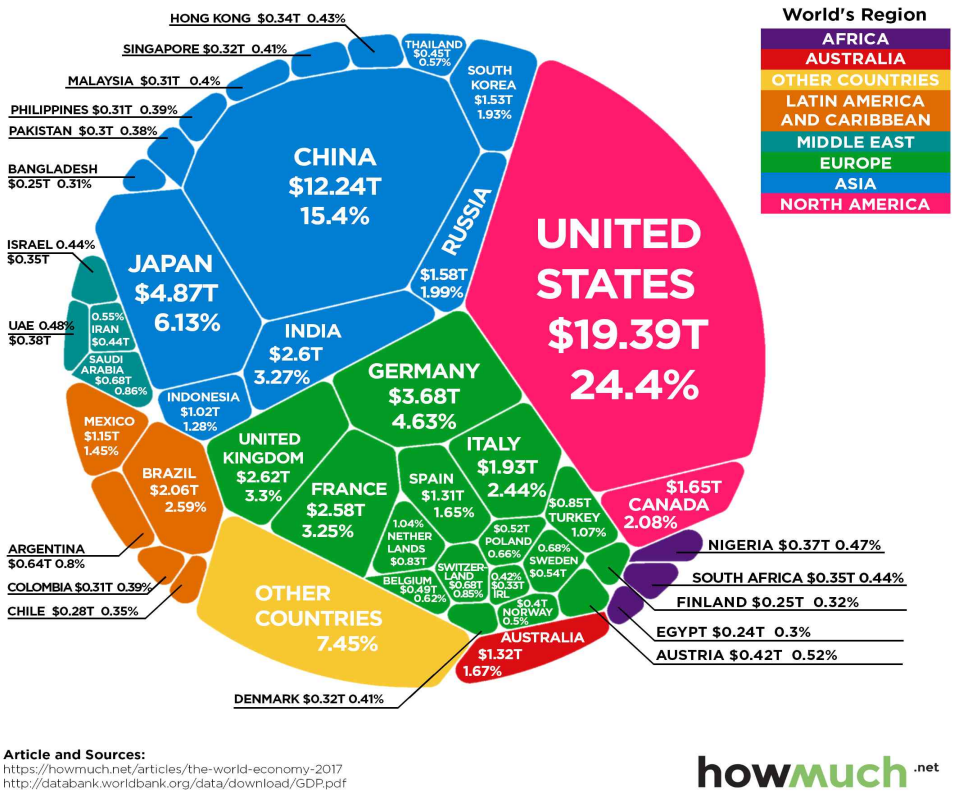
먼저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전인영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 우리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축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한미동맹 정상화를 위한 간단한 제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경성국력(hard power)

- 2017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대비 24%, 중국이 15.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6.13%, 한국은 1.93%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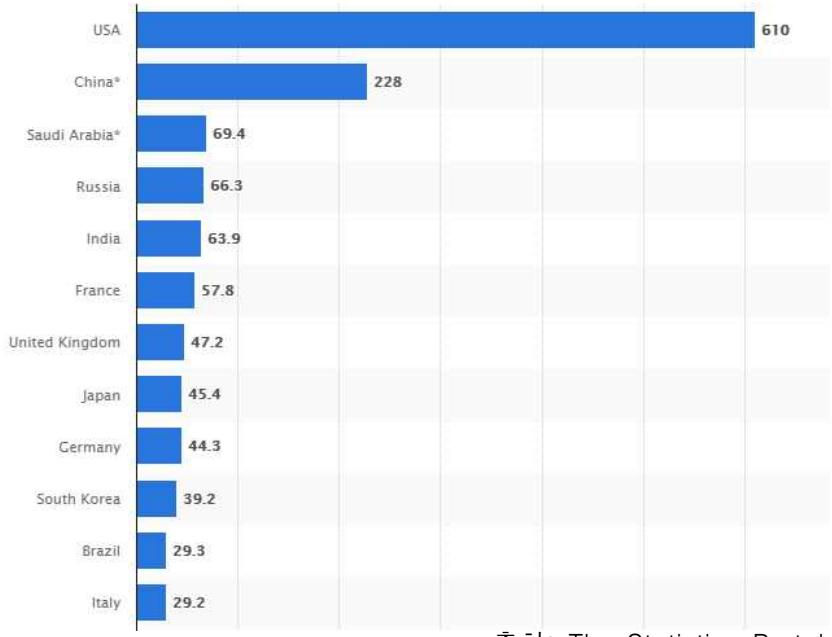
- 2017년 IMF 기준 1인당 GDP는 미국이 7위(59,792$), 일본 23위(38,448$), 한국 27위(29,938$), 중국 71위(8,643$)로 집계됐다.

<2017 주요국가 GDP 비중(세계은행)>



- 세계 대비 국방비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위 중국의 3배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탄두 보유량에서도 미국이 6,450, 중국이 280개로 조사됐다(2018).

<2017 세계 주요 국방비 지출국가(10억$)>



출처: The Statistics Portal

<2018년 세계 핵무기 현황 (SIPRI)>

Country	Deployed warheads	Other warheads	Total inventory
USA	1 750	4 700	6 450
Russia	1 600	5 250	6 850
UK	120	95	215
France	280	20	300
China	–	280	280
India	–	130–140	130–140
Pakistan	–	140–150	140–150
Israel	–	80	80
North Korea	–	(10–20)	(10–20)
Total	**3 750**	**10 715**	**14 465**

■ 연성국력(soft power)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IMD)이 매년 집계하는 국가경쟁력순위는 연성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의 4개 부문과 하위의 20개 항목, 340개의 지표로 집계된다. 미국은 16는 3위를 제외하고 부동의 1위를 고수해오고 있으며 중국은 10-2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25위와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40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순위(2014년~2018년)

국가명	'14	'15	'16	'17	'18
미국	1	1	3	4	1
홍콩	4	2	1	1	2
싱가포르	3	3	4	3	3
네덜란드	14	15	8	5	4
스위스	2	4	2	2	5
덴마크	9	8	6	7	6
아랍 에미리트	8	12	15	10	7
노르웨이	10	7	9	11	8
스웨덴	5	9	5	9	9
캐나다	7	5	10	12	10
룩셈부르크	11	6	11	8	11
아일랜드	15	16	7	6	12
중국	23	22	25	18	13
카타르	19	13	13	17	14
독일	6	10	12	13	15
핀란드	18	20	20	15	16
대만	13	11	14	14	17
오스트리아	22	26	24	25	18
호주	17	18	17	21	19
영국	16	19	18	19	20
이스라엘	24	21	21	22	21
말레이시아	12	14	19	24	22
뉴질랜드	20	17	16	16	23
아이슬란드	25	24	23	20	24
일본	21	27	26	26	25
벨기에	28	23	22	23	26
한국	26	25	29	29	27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 콰카렐리 시몬스(QS:Quacquarelli Symonds)가 매년 집계하는 세계대학순위도 국가별 연성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상위 20개 학교 가운데 중국 소재 대학은 1개(칭화대), 미국 소재 대학이 11개로 집계되고

있다.

2019	2018	Institution Name	Location
1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nited States
2	2	Stanford University	United States
3	3	Harvard University	United States
4	4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United States
5	6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6	5	University of Cambridge	United Kingdom
7	10	ETH Zurich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Switzerland
8	8	Imperial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9	9	University of Chicago	United States
10	7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11	15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Singapore
12	11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Singapore
13	13	Princeton University	United States
14	14	Cornell University	United States
15	16	Yale University	United States
16	18	Columbia University	United States
17	25	Tsinghua University	China
18	23=	University of Edinburgh	United Kingdom
19	19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ted States
20	21=	University of Michigan	United States

- 인권과 삶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DI)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자유진영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력, 교육 수준, 기대수명 등을 근거로 산출되며 2018년 기준으로 미국(12위), 일본(19위), 한국(22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60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통상 10위권 이내에 노르웨이와 핀란드 등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 포진해 있어 측정의 신뢰도를 더하고 있다.

	Human Development Index (HDI)	Life expectancy at birth	Expected years of schooling	Mean years of schooling	Gross national income (GNI) per capita	GNI per capita rank minus HDI rank	HDI rank
VERY HIGH HUMAN DEVELOPMENT							
1 Norway	0.953	82.3	17.9	12.6	68,012	5	1
2 Switzerland	0.944	83.5	16.2	13.4	57,625	8	2
3 Australia	0.939	83.1	22.9	12.9	43,560	18	3
4 Ireland	0.938	81.6	19.6	12.5	53,754	8	4
5 Germany	0.936	81.2	17.0	14.1	46,136	13	4
6 Iceland	0.935	82.9	19.3	12.4	45,810	13	6
7 Hong Kong, China (SAR)	0.933	84.1	16.3	12.0	58,420	2	8
7 Sweden	0.933	82.6	17.6	12.4	47,766	9	7
9 Singapore	0.932	83.2	16.2	11.5	82,503	-6	8
10 Netherlands	0.931	82.0	18.0	12.2	47,900	5	10
11 Denmark	0.929	80.9	19.1	12.6	47,918	3	10
12 Canada	0.926	82.5	16.4	13.3	43,433	10	12
13 United States	0.924	79.5	16.5	13.4	54,941	-2	12
14 United Kingdom	0.922	81.7	17.4	12.9	39,116	13	14
15 Finland	0.920	81.5	17.6	12.4	41,002	10	15
16 New Zealand	0.917	82.0	18.9	12.5	33,970	18	16
17 Belgium	0.916	81.3	19.8	11.8	42,156	6	16
17 Liechtenstein	0.916	80.4	14.7	12.5	97,336	-15	16
19 Japan	0.909	83.9	15.2	12.8	38,986	9	19
20 Austria	0.908	81.8	16.1	12.1	45,415	0	20
21 Luxembourg	0.904	82.0	14.0	12.1	65,016	-13	26
22 Israel	0.903	82.7	15.9	13.0	32,711	13	21
22 Korea (Republic of)	0.903	82.4	16.5	12.1	35,945	8	22
24 France	0.901	82.7	16.4	11.5	39,254	2	23
25 Slovenia	0.896	81.1	17.2	12.2	30,594	12	24
26 Spain	0.891	83.3	17.9	9.8	34,258	7	25

■ 국제정치학에서 모든 국가들은 세력의 균형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적 이익의 추구를 용이하게 하려는 국제정치상의 원리에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은 서로 이 곳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영토로 만들기 위해 경쟁해 왔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입(intervention), 보상(compensation), 완충지대 설치(buffer zone),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영향권 형성(sphere of influence), 군비증강(armaments), 동맹(alliances) 등 한스 모겐소가 지적한 7가지 전술이 행해져 왔음.

■ 한미동맹과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관련 국가들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변질된 공산 진영간의 이념적·군사적 대결구도에서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 이론적으로 국력,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을 것이며 굳이 국제정치 이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원교근공(遠交近攻)은 시대를 불문한 진리라 할 수 있음.

■ 평소 반서구화, 반미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 빈축을 사는 경우만 보더라도 자유와 풍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쪽이 어디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심지어 북한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 청년단체의 대표도 공영방송에 출연해 “북한에는 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해 화제가 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크게 ① 일반적인 강대국에 대한 질시 ② 심정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우방으로 이해 ③ 교육 풍토에서 비롯된 조건반사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나 주한미군의 각종 사건사고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음.

■ 국민여론이 국정 전반을 좌우하는 자유사회의 특성상 한미동맹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천사는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이며 우방이라는 점, 그들이 주창하는 시장과 국제무역,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공통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해야 함.

■ 특히 국제정치학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북핵, 북한인권 등 대북 정책을 두고 반복되는 남남 갈등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국내윤리와 국제정치의 무정부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으며 항시 안보위협에 노출돼 있음
- 두 국가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국력의 합보다 큰 국가가 나서야 함
- 핵무기 등 국가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을 선의로 포기하는 국가는 없음
- 모든 통일은 한 국가가 사실상 패망한 것을 건재한 이웃 국가가 흡수하는 형태였음
- 북한과 남한의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절충될 수 없고, 절충된 바 없는 체제
-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서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협상으로 패배하거나 기만당하는 일은 흔치 않으며, 일시적으로 가능해도 얼마든지 원점으로 돌아감(예: 재협상 요구)

■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까지 국민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음은 그간 이전 우파 정부들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국민교육의 문제를 얼마나 등한시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